

韓 안보리 재진입...“중·러 소통 복핵 대응”

여성·평화·안보 등 신흥안보 논의 주도 180표 지지...“단독 입후보 위해 교섭”

외교부는 7일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관련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 차원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우리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강화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리 내에서 평화 유지와

평화 구축, 여성, 평화, 안보뿐 아니라 사이버안보, 기후와 안보 등 신흥 안보에 관한 논의도 주도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전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참여했으며, 아시아태평양양그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우리나라는 총 유효투표 192표 중 180표의 지지를 얻어 아태그룹 소속의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안보리는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분쟁을 포함하여 국제 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관이다. 필요시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한국의 이번 선출은 1996~1997년, 2013~2014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이어 세 번째다. 2024년에는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다.

외교부는 안보리 수임 활동에 대비해 이날 외교부 내 ‘안보리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이를 중심으로 안보리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의제별 논의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부와 주유엔대표부, 각 공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우리의 선거 전략은 아시아태평양 한 개 공석에 여타국의 입후보를 방지하고, 단독 입후보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며 “우리는 단독 입후보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전방위

적 교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평화유지에 대한 회원국의 공헌과 지역적 배분을 고려해 총회에서 매년 5개국씩 선출되며 연임은 불가하다. 아시아에는 1개국이 할당되는데, 한국은 이번 선거에서 단독 입후보를 유지했다.

당국자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 일본, 다른 유사입장국이 의장국 활동을 할 때 적극적으로 사전 질의하고, 특히 북한 인권 문제가 공식적으로 안보리에서 다뤄지도록 계속 교섭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일간의 공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라며 “북한 문제 뿐만 아니라 안보리의 모든 의제에 대해서 중국·러시아가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만큼 계속적으로 소통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뉴스

민주·정의 ‘세습 우력’에 “이래도 괴담” 민주 “그렇게 안전하다면 왜 방류하겠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7일 후쿠시마 항만에서 기준치 180배의 ‘세습 우력’이 잡힌 데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런 충격적인 결과에도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우려가 괴담이란 말이나”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고 나면 ‘세습 우력’이 우리 바다에서 잡히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나”며 “방사능 오염수를 남의 나라의 일처림 말하지 마라. 집권여당이 우리 바다를 지키겠다고 검증TF를 만들어놓고 일본을 두둔하기에 바쁘기만하니 정말 파렴치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고 나면 우리 바다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며 “그렇게 안전하다면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나도 사용하지, 왜 바다에 방류하겠나”고 비판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다. 그 여파가 몇 세대에 걸쳐서 될지 누구도 모른다”며 “제대로 된 정부라면 마땅히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고 받은 것이 ‘돈가스 대접’ 인지 답하시라”고 압박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이제는 되도 않는 변명을 위해 얼치기 방사능 전문가, 과학자 총재까지 내며 거짓홍보에 활안이 되어있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뉴스

명진 광주시의원 “국비 공모사업 적극행정 필요”

광주시의회 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2)은 7일 광주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2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의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공모사업에 대해 사업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집합정보화 교육사업을 단적인 예로 들었다.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뒤 국비 50%와 시비 50%로 교육 강사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프로젝트다.

명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컴퓨터, 모바일교육 등을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4곳 중 3곳만 선정이 되다 보니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선정기준을 완화하거나 예외규정을 요구해 국비가 반납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명 의원은 또 “앞으로 자치사무의 다변화로 인해 여러부서에 해당되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기초실이 이를 조정해 부서를 선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라’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등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앞 유가족 농성 시작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尹 “고속열차 2배 늘려...전국 2시간대 생활권”

“충북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속도감 있게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촘촘한 교통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며 충청북도가 더 편리하게 이동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 청주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개최된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식’에 참석했다. 복선화는 평택-오송 구간 지하에 46.9km의 고속철도를 추가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5년간 약 3조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8년 이 철도가 개통되면 인천, 수원, 거제도도 새로 고속열차를 운행할 수 있어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고속열차를 탈 수 있게 된다. 고속열차 운행이 2배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2복선화가 완공되면 인천, 수원, 거제도 등 전국 곳곳으로 고속열차를 운행할 수 있어 전국 2시간대 생활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우리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고속열차가 시속 400km로 달릴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고속철도 건설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공정환 접근성’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요소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충청 지역의 교통

인프라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먼저 “청주공항에서 청주 도심과 오송역을 거쳐, 세종과 대전까지 새로운 교통축이 만들어지면 지하철도 더욱 편리하게 공항과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송 철도산업 클러스터, K-바이오 스퀘어 조성 등을 통해 충북 지역을 국가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행사 참석자들은 충북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추진, 충북 국가첨단산업 중심 육성에 박수를 화답했다.

‘이래경 낙마’에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 질 것” 이재명 “당 문제에 대해 당 대표가 언제나 책임져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추모에 대해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당 대표가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책임은 당 대표가 언제나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대표가 권한을 가진 만큼,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든, 안 했든, 논의를 충분히 하고 하는 일입니다만 결과에 대해서 언제나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당 대표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이 대표가 본인의 거취에 결단을 내릴 것인지, 권철승 수석대변인의 최원일 천안항장 관련 발언 논란에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이래경 다론펙년 명예이사장은 지난 5일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선임됐다가 “천안항장 지족설” 등 과거 발언이 논란을 빚어 약 10시간만에 사퇴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이사장의 해촉을 요구한 최원일 전 천안항장 소환에 대해 “부하들을 다 죽이고 무슨 낱짝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막말 논란”이 불거졌다.

전남 교육현장 공문서 감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남도교육청의 공문서 감축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전남도의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1)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이 7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72회 제2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불필요한 공문서를 감축해 업무 신속성과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교육감은 공문서 감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공문서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공문서 감축 성과를 조직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최근 행정이 복잡하고 다각화되면서 공공행정에서 다양한 공문서가 생산되고 있으나, 일선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공문 처리로 인해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 의원은 “공문서 감축은 직원들의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할 것이다”며 “불필요한 공문서 감축 등 행정 능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내달 16일 전남도의회 제37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여당 “셀프조사 오만”...선관위 “감사 진지하게 고민”

여당 행안위, 선관위 과천 청사 항의방문 후 면담

국민의힘은 7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방문 감사원 감사 수송을 촉구했다. 선관위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에 한해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으나, 여전히 기관의 독립성·중립성 침해를 우려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회의 간사는 이날 오전 행안위 소속 의원들과 과천 선관위 청사를 방문해 김필곤 상임위원, 김문배 기초실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 앞서 이 의원은 “행안위 원

안집의에서 처음으로 여러 가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북한 관련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그동안 수차례 기자회견이 있었고, 당 지도부의 말씀과 의견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보이는 현재의 모습에 대해 여러 가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앙선관위원장이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위원장 본인이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조직의 잘못된 여러 가지 부분을 발본색원한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선관위 전체 위원회의

를 통해서 전원일치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관위가 여전히 본인이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감사하고, 고발하는 대상만 수사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자세가 되지 않은 것”이라며 “오만스럽고, 독선적인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선관위는 감사수용할 경우 선례를 남긴다는 점을 여전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특혜 채용 사안의 심각성과는 별개로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선관위 보고에 따르면 기준에 밝힌 현직 특혜 채용 의혹 4건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는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뉴스

‘내분·예산’에 발목 잡힌 광주 장애인시설 재건축 등 지지부진...장애인회관, 공공어린이재활센터 등

광주지역 일부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사업이 임지와 예산, 내부 이견 등에 발목이 잡혀 더디게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서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7일 광주시 복지건강국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결산심사에서 “5개 장애인복지시설 건립 또는 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어 빠른 추진 의지와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오랜 숙원인 장애인회관 건립의 경우 올해 사업기간이 끝남에도 일부 장애인단체의 “부지 이전” 요청 등으로 관련 용역이 지난해 1월부터 1년5개월 정도 중단된 상태다.

중앙부처에서는 이미 교부된 국비 중 올해 미집행된 사업비는 전액

반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 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경우 호남권 재활병원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한 병상 확충을 골자로 국비와 시비가 반반씩 투입되는 사업이나 현재까지 시비는 없이 국비만 36억원이 편성돼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장애인복지수련시설은 당초 올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으나 건축 설계용역 지연과 협의의 문제로, 창가·언어장애인복지관은 설계공모 운영과 지침이 일부 변경되면서, 시립장애인복지관 재건축은 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서 의원은 “담당부서의 빠른 추진 의지와 결단력으로 더딘 사업들에 대해 적극행정을 펼칠 때”라고 강조했다. /김도기 기자

호매민평

이태원

독주

안보리비상임이사국 지정내공로

하저거다!

사법 대법관추천 개뿔겨ㅋㅋㅋ 김투기

대헌